

D 18-15 / 1991. 3

1990년도  
농민이 바라는 농정  
현지통신원의 농정통신보고 요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 머리말

이 資料는 當研究院이 農政에 관한 일반 農民들의 輿論을 調查·蒐集할 목적으로 1978년부터 農村거주 農民을 대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現地通信員이 1990년 한해 동안에 편지 형식으로 보내온 農政 및 農村·農業問題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전의사항들을 要約·整理한 것이다.

現地通信員 개개인이 보내온 農政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나 建議는 農民들 입장은 개진한 극히 단편적이고 皮相의 내용도 있고 다소 중복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비판이나 일방적인 呼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되도록 그 뜻을 살려 정리함으로써 農民들의 시각과 입장을 통해 農촌현실과 사정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왜냐하면 우리의 農政 및 그 研究의 제1차적인 관심대상은 農村·農民이기 때문이다.

농촌을 農民의 삶의 공간적 토대라고 볼 때 農政 및 農業問題에 대한 農民의 意見이나 반응 내지 輿論은 우리의 農村社會·經濟研究에 있어서 주요한 收斂領域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런 뜻에서 粗放하고 非體系的이지만 1990년에 이어 아홉번째로 이 資料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관심있는 분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란다..

1991. 3.

院長 許信行

빈

면

# 目 次

## 머 리 말

|                     |    |
|---------------------|----|
| 概 說 .....           | 1  |
| 農政建議事項 類型別 分類 ..... | 9  |
| 1. 秋·夏穀收買 .....     | 10 |
| 2. 營農資材 .....       | 15 |
| 1) 肥 料 .....        | 15 |
| 2) 農 藥 .....        | 15 |
| 3) 農機械 .....        | 18 |
| 4) 其 他 .....        | 20 |
| 3. 農畜產物 價格 保障 ..... | 22 |
| 4. 生產基盤造成 .....     | 25 |
| 5. 農業金融·農家負債 .....  | 28 |
| 6. 農村社會·營農後繼者 ..... | 31 |
| 7. 勞動力·勞賃 .....     | 33 |
| 8. 農地稅·農地購入 .....   | 35 |
| 9. 畜 產 .....        | 39 |
| 10. 特 作 .....       | 41 |
| 11. 農外所得 .....      | 42 |
| 12. 農村福祉·文化施設 ..... | 43 |
| 13. 農畜產物 輸入 .....   | 45 |
| 14. 農畜產物 流通構造 ..... | 48 |
| 15. 子女教育 .....      | 49 |
| 16. 水害·旱害 .....     | 50 |
| 17. 環境污染 .....      | 51 |
| 18. 其 他 .....       | 53 |

빈

면

## 概 說

이 資料는 農村에 거주하는 本院 현지통신원들이 1990년 한해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農業·農村·農政施策」 문제에 대해 통신문으로 보내온 304건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요약, 분류·정리한 것이다.

농민들이 農政에 대해 바라는 建議內容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 등과 관련한 농축산물 수입개방 문제를 비롯해서 秋穀收買, 營農資材, 農地購入資金, 生產基盤造成, 農村社會, 農業金融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農畜水產物輸入과 관련한 건의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의 진행 및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할 대체작물 선정상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輸入自由化로 인해 부득이 수입개방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익금을 농어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이 현지통신원이 보내온 農政에 대한 건의사항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肥料, 農藥, 農機械 등 營農資材部門에 대한 건의가 15.5% (47명)로 가장 많았고, 農畜水產物輸入 13.8% (42명), 秋穀收買 9.5% (29명), 農地購入資金 9.2% (28명), 生產基盤造成 6.9% (21명), 農村社會·營農後繼者 5.9% (18명), 農畜產物價格保障 5.6% (17명), 農業金融 5.6%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원들의 분야별 건의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秋 · 夏穀收買

農民들은 秋穀收買量과 價格決定이 높어, 갚아야 할 營農費, 負債 등 각종 償還資金 마련을 위해 수매발표 이전에 일시에 市場에 出荷하여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추수 전에 확정해 주기를 요망하였다.

또한 收買後 나머지 잔량은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추가적인 수매실시와 더불어 앞으로의 收買는 가격인상 폭보다는 농가희망량의 全量收買에 當局이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 營農資材

**肥料** : 비료 자유판매제도 실시 이후부터 비료부족과 품귀현상이 자주 발생, 영농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적기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망하고 있었다.

**農藥** : 농민들은 農協에 農藥이 품귀되거나 農협에서 공급하지 않는 농약은 시중 농약상들이 높은 利潤을 붙여 비싸게 팔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農藥도 의약품처럼 가격정찰제를 실시하고 農협에서는 전 품목에 대한 농약을 고루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같은 종류 농약에도 가지수가 너무 많고, 사용방법에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지적, 비슷한 농약을 통합하여 종류수를 줄여주고, 농약포장지에 다른 농약과의 혼합사용의 타탕여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릇된 농약혼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문지식과 검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방법 등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및 부적합(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처리지침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無公害農藥을 개발해줌으로써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農機械** : 농민들은 농지의 耕地整理 확대와 농촌인력의 高齡化에 따른 인력난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각종 농기계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나 故障이 발생할 경우 수리센타에 부품이 없어 수리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同一製品의 경우에도 생산년도에 따라 부품규격이 달라 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같은 회사 제품은 부품규격을 통일시켜 주고, 부품센타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부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길 요망했다.

政府에서는 機械化 營農團에 50%의 政府補助를 해주는 데 반해 개인이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혜택이 별로 없어 中農以下の 農家가 自力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부담이 되므로 機械化營農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개인명의로 구입시에도 補助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 農畜產物價格保障

當局은 농축산물가격 폭락으로 내림세가 지속될 경우 조용하다가, 값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안정, 농축산물수입개방 불가피론을 내세워 값을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 왔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농민들을 농사가 豐作을 이뤄 잘 되었다고 해도 가격불안정으로 營農意慾을 잊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민이 政府를 믿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農畜產物價格保障을 해줄 것을 요망했다.

## 生產基盤造成

요즘 農村은 營農에 종사하는 젊은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부 農土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인력난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機械化 營農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耕地整理가 가능한 田畠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지정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農閑期인 겨울철에 하우스, 기타 원예작물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므로, 水稻作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준으로 引下해 주고 몽리구역의 수리불안전답에도 전기가설과 전기요금의 보조 등 정부차원의 支援을 요망했다.

## 農業金融 · 農家負債

農村住宅을 改良 · 新築하려 해도 1개면에 1~2가구분에 해당하는 融資金이 할당되고 그나마 금액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망했다.

현재 농협의 일반상호신용 대출금리 14%는 농가실정으로 보아 높다고 지적, 貸出金利를 낮춰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고, 營農資金의 償還期間도 1년은 너무 짧다고 지적, 3~4년 정도로 연장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이외에 當局의 農漁家 負債輕減對策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자금 금리인하 및 원금상환 연기조치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負債增加率이 농업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지고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미흡하므로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農村社會 · 營農後繼者

특히 젊은 층의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 늙은 사람들은 그만큼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부마저 구하기가 힘들어 산골 논이나 밭이 점차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산간지역을 포함한 전체 農耕地의 경지정리와 영농기계화가 시급한 설정이다.

농촌생활이 고단하고 所得이 적어 농촌총각과 결혼하려는 처녀가 없어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農漁民後繼者 선정기준에 따르면 후계자의 연령이 3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20~30대의 젊은 후계자들은 처음 계획대로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후계자 선정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 勞動力 · 勞賃

요즘 農村에서는 남·여 공히 2만원의 품삯을 주어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他地域에서 남자 2만5천원, 여자 2만2천원의 터무니 없이 비싼 외지전입인력을 구하고 있으나 이마저 구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타산이 맞지 않아 산간지대의 경우 田畠의 耕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2~3년 후면 잡초만 무성한 田畠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農村에서는 60~70세의 고령 노인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機械化營農, 委託營農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각종 營農費가 크게 올라 所得은 형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當局의 시급한 支援對策을 요망했다.

## 農地購入資金 · 農地稅

農村에서는 農地賣買證明發給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賣買마저 침체되어 子女教育, 營農費 등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농지를 급히 처분하려 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민이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郡)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농토를 살 수 있도록 法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농지의 營農規模를 확대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좋은 뜻에서 시행되고 있는 農地購入資金 支援이

실제 耕作人은 바뀌지 않은 채 登記簿上 소유자 명의만 바꾸어 融資를 받는 등 본래의 의도대로 이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라리 농지구입자금을 機械化 營農團 지원금과 영농자금으로 돌려 融資支援해 줌으로써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농촌인구의 도시전출이 많아짐에 따라 그 농지를 구입해 타산맞는 농업을 하고 싶지만 3ha 농지소유 상한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도 있었다.

## 畜 產

畜產農家들은 好況을 누릴 때는 乳加工業體가 이익을 보고 不況일 때는 畜產農家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 現制度의 改善方案으로 集乳一元化 실시를 요구했다.

## 特 作

김장배추·무값의 폭락으로 인건비와 수송비도 견지지 못하게 되어 수확을 포기, 밭에 그냥 방치한 농가가 많다. 이럴 경우 당국은 적정 금액으로 補償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농민들이 1년 동안 힘써 지은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 農外所得

食糧不足일 때 마련한 絶對農地는 일부를 과감히 해제, 소규모 工場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農閑期에 공장에 나가 農外所得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 農村福祉 · 文化施設

當局의 住宅改良施策에 부응하여 주택의 新改築과 부엌을 입식으로 改造하려는 희망농가가 많으나 支援對象農家와 支援金이 너무나 적다고 지적, 支援이 확대를 요망했다.

## 農畜產物 輸入

농민들은 우루파이 라운드 農業協商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있는 作目 및 代替作物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정부의 과감한 投資支援을 요구했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농민이 많다고 지적,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UR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책에 대한 教育實施를 요망했다. 세계적인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부득이 輸入開放을 해야 할 경우 수입창구를 농협 등 농민과 관련한 단체로 一元化해 수입에 따른 이익금이 해당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 農畜產物 流通構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막아 이들의 이익을 최소화함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 面 단위를 大都市 소비지역과 연결시켜 直去來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그리고 현재 多段階로 되어 있는 流通構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子女教育

농민들의 教育費 경감대책으로 올해부터 農耕地 1정보미만 경작농가에 지원하는 子女學資金 혜택이 중학생과 實業高에만 국한되고 人文系는 제외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진정한 학자금 지원 측면이라면 인문계 고등학교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망했다.

## 環境汚染

農村은 각종 폐비닐, 농약공병 등으로 인한 環境汚染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韓國資源再生公社가 일부 수거를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제때에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토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아까운 資源을 再活用하기 위해서라도 수거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었으며, 產業廢水와 소규모 畜產團地의 畜產廢水가 농경지로 흘러들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 其　他

농촌의 많은 농민들은 본인의 土地를 所有하고 있으면서도 特別措置法 기간내에 所有權 移轉登記를 하지 못해 未登記 상태로 있다면서 한번 더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주변보다 땅값이 훨씬 싼 데도 土地稅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 전화, 전기요금의 가정방문 수납제도 등에 관한 건의도 소수 있었다.

「農政建議」事項 類型別 分類

|    | 類 型 別      | 합계  | %     |
|----|------------|-----|-------|
| 1  | 秋・夏穀收買     | 29  | 9.5   |
| 2  | 營農資材：肥 料   | 5   | 1.6   |
|    | 農 藥        | 19  | 6.3   |
|    | 農 機 械      | 19  | 6.3   |
|    | 其 他        | 4   | 1.3   |
| 3  | 農畜產物價格保障   | 17  | 5.6   |
| 4  | 生產基盤造成     | 21  | 6.9   |
| 5  | 農業金融・農家負債  | 17  | 5.6   |
| 6  | 農村社會・營農後繼者 | 18  | 5.9   |
| 7  | 勞動力・勞賃     | 7   | 2.3   |
| 8  | 農地稅・農地購入   | 28  | 9.2   |
| 9  | 畜 產        | 8   | 2.6   |
| 10 | 特 作        | 6   | 2.0   |
| 11 | 農 外 所 得    | 3   | 1.0   |
| 12 | 農村福祉・文化施設  | 12  | 3.9   |
| 13 | 農畜產物輸入     | 42  | 13.8  |
| 14 | 農畜產物 流通構造  | 10  | 3.3   |
| 15 | 子 女 教 育    | 8   | 2.6   |
| 16 | 水 害・旱 害    | 5   | 1.6   |
| 17 | 環 境 汚 染    | 7   | 2.3   |
| 18 | 其 他        | 19  | 6.3   |
| 計  |            | 304 | 100.0 |

## 1. 欲。夏穀收買

■ 산간오지에서 벼농사만을 짓는 농민들에게 정부수매 배정이란 게 고작 작년에 비해 약 15%선에 지나지 않아 농자금상환, 자녀교육비, 농기계 상환자금을 해결하려 하니 한심한 실정이다. 인상폭보다 수매량을 대폭 늘려주었으면 한다. (경주군 감포면 전동리, 허 판전)

■ 일반벼는 생산량의 평균 10% 정도밖에 수매하지 않았는데 현상태에서 일반벼 수매가 종료된다면 수매에 응하고 남은 일반벼는 시장상인에게 80Kg 가마당 8만원선에 방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수매가 종료되면 일시 홍수출하로 인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추가 수매량의 확대와 수매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요망된다.

(보성군 율어면 이동리, 이 종수)

■ 농산물가격을 예시는 못 할망정 추수가 끝나고 수매가 시작되었는데도 추곡가를 결정하지 못했으니 농가부채 상환 등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놓인 농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공산품이나 기타 물가의 인상을을 참작하여 올해 수매가를 한자리수로 묶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20% 정도 올려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양 병모)

(보성군 이력면 화방리, 정 종두)

■ 농가에서는 영농경비와 각종 자금상환 등을 수매가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매가와 수매량을 늦게 결정하는 데다 인상폭도 한자리 숫자 운운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농민을 위한다면 최소한 20%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 예년까지만 해도 미질보다는 생산량에 더욱 치중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일반미 확대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계와 통일계는 15% 정도의 차등으로 전량 수매해 주었으면 한다.

(순창군 인계면 가성리, 박정선)

■ 매년 겪는 일이지만 작목에 따른 계절적 가격등락 때문에 농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주소득작목이 미작(쌀)으로 현재는 조생종 벼를 시중에 내고 있는데 갑자기 출하량의 증가로 쌀값이 떨어지는 등 가격안정이 절실하다. 한편 지난해는 국회에서 추곡수매량과 가격결정이 늦어 대부분 자금마련을 위해 수매발표 이전의 시장출하(영농비, 부채상환)로 제값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늦어도 11월 이전에 확정하였으면 한다.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안 재각)

(예천군 대합면 모전리, 정 연락)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조 춘석)

■ 농민들은 추곡수매가격 인상보다는 전량 수매를 원하고 있다. 전량 수매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잔량을 낮은 값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매가 인상은 아무 효과가 없게 된다.

행정기관에서 수매량을 할당할 때에 마을 단위로 배정하기 때문에 30호 되는 마을이나 300호 되는 마을이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평하지 못하다.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박 병도)

■ 추곡은 농가희망 전량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매해 주고 수매가격 인

상액도 높여 주었으면 한다. '91년산 양파·마늘 약정제 하한가 결정액이 다른 물가 상승에 비하면 너무 낮다. 일반물가의 인상폭에 준해서 결정했으면 한다.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정 연락)

■ 고경면 동도리의 경우 일반벼 재배면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매 배정량은 6백~7백가마가 적절하나 당국은 1백98가마를 배정,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중 쌀값이 수매가를 밀들고 있어 농협부채 상환과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매량을 확대 배정해 주기 바란다. (영천군 고경면 동도리, 박 규현)

■ 일반벼를 수확한 지 60일이 경과, 건조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수매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농민이 불응해서 수매가 부진한 듯이 보도하고 있다. 정부 수매가는 80kg 2등급 기준 96,000원(도정료 4,400원을 포함하면 100,000원 정도)이고, 시중 쌀가격이 수매가보다 1만5천원 정도가 싼데 일반벼 수매에 농민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농촌 실정에 맞지가 않는다. 또한 본인은 일반벼 40kg들이 150개를 신청했는데 33%인 50개를 할당받고 보니 농협부채 상환, 학자금 등이 걱정이다.

'90년도에는 일반벼도 통일벼와 마찬가지로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를 꼭 예시해 주기 바란다.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조 보언)

■ 당국의 농정시책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통일계 벼를 450만섬 수매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나 일반계는 수매량을 예시하지 않아 추수가 한창인 요즘 농민들의 걱정거리를 더해 주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 올해의 추곡수매가는 물가상승과 각종 임금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13% 이상은 인상되어야 하며, 수매량도 1,000만섬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통일계와 일반계 벼의 수매가격은 차등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벼농사 추진과

정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예시해 주었으면 한다.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김 의기)

■ 이곳은 북부산간지역으로 매년 9월 중순경이면 대부분 추수를 끝내고 수매시까지 2개월 정도 보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수매가격 인상보다는 농가희망 전량을 조기에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조 춘석)

■ '90년의 추곡수매는 일반벼·통일계의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침종전에 미리 예시해 주기 바라며, 일반계의 수매량을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문 길선)

■ 추곡 수매는 연중실시하되,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경지정리는 농가부담 없이 전액 국고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곡성군 입면 금산3리, 정 삼성)

■ 지난해 초가을에 일반미 1가마(80Kg)에 9만 2천원 하던 것이 1월 현재 8만 8천원에도 잘 팔리지 않아 농협의 영농자금과 일반신용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 추가로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해 주기 바란다. (파주군 파주읍 부곡리, 고 종서)

■ 금년도 보리수매가격의 10% 인상은 인건비 등 각종 영농비 상승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없으며 이는 보리재배 기피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매가격을 좀더 현실화시켰으면 한다.

(승주군 상사면 응령리, 김 종근)

■ 추곡수매가가 한 자리수 인상된 데 대해 불만이 많은나 이는 차치하고 1년 동안 힘들여 지은 농산물만은 농민이 원하는 양을 정부에서

전량수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이 구원)

■ 추곡수매가격을 매입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월 이전에 예시되어야 한다.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송 우용)

## 2. 營農資材

### ① 肥料

■ 이곳은 고냉지라 타지역보다 모내기를 일찍 시작하는데 반해 비료가 부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비료자유판매제도가 실시된 후부터 품귀현상을 보였다. 단위농협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올해 판매량이 다팔려 할 수 없다는 말뿐 다른 대답은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확보해 적기에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

(남원군 아영면 성리, 김 재곤)

### ② 農藥

■ 이곳의 많은 농민들은 농약상의 권유에 따라 금년에 M이라는 제초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작년에 N제초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몇배나 많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걱정이다. 이 약제의 성능 및 약효를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

(김포군 양촌면 흥신리, 김 태석)

■ 9월초순경부터 벼멸구가 발생 농약을 구입하여 1,2차 방제를 하였지만 벼멸구가 계속 확산되면서 방제를 하려 해도 농협이나 시중농약상에는 없고 그나마 있다 해도 농협에서 3kg 봉지당 680원에 판매되

던 것이 시중에서는 품귀를 틈타 2,000원에 거래되는 등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제때 벼멸구 방제를 못해 예상수확량의 20% 정도 감수가 예상된다. 앞으로 농약생산회사는 충분한 농약을 생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논산군 성동면 월성리, 주 병열)

■ 농협이나 시중농약상에서 판매하는 농약중에는 이름만 바꿔 달아 종전보다 값을 마구 올려 받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구나 매년 농약살포회수 마저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 2중, 3중으로 농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논산군 성동면 월성리, 주 병열)

■ 이곳 지역은 사과단지로서 낙파방제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시된 잔류농약 규제강화로 낙파방제약 I제품이 유기인체여서 생산을 중지한 관계로 과수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낙파방제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 내년도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김 동수)

■ 현재 농약잔류성분 허용기준치 적용에 관한 내용을 이곳은 농촌지도소가 홍보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농민들은 모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협, 축협, 원협 등을 통해 교육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완전히 인식된 후 농약잔류허용기준치에 대한 법을 시행했으면 한다. (대덕군 산내면 대별리, 양 승만)

■ 농촌에는 요즘 고르지 못한 기상조건, 장마철 등을 맞아 한창 농약수요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비슷 비슷한 농약이 너무 많아 선택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농약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구입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다.

(김제군 광활면 옥포리, 이 동구)

■ 농협에 농약이 매진되었을 때, 그리고 농협이 공급치 않는 농약에 대해 시중 농약상들은 높은 이윤을 붙여 비싸게 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농약에 가격정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협에서는 농약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약을 구입, 판매해 주었으면 한다.

(승주군 상사면 응령리, 김 종근)

■ 농약포장지에 표시된 설명서대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여도 완전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간혹 영농교육 때에 문의해 보면 농민들의 사용 잘못이라고 설명하는 예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농약함량이 과연 설명서대로 지켰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농민들이 어느 제품의 농약이든지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량이 적절한가를 제조과정부터 완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상주군 청리면 삼괴리, 김 준기)

■ 요즘 농촌에는 농약중독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농약제조회사에서 인체에 무해한 농약을 개발하지 못한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농약 살포를 완전 기계화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지역여건만 가능하다면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인건비 절감은 물론 인체의 농약중독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바란다.

(합천군 덕곡면 남제리, 서 재섭)

■ 금년 9월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및 부적합(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처리지침에 대해 많은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농민들 대부분이 이러한 농약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검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방법 등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라리 무공해 농약을 개발·제조해 농민들은 그저 마음 놓고 농산물이나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이 구원)

■ 같은 종류의 농약이라도 가지수가 너무 많고 사용방법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비슷한 농약은 통합하여 숫자를 줄이고, 농약포장에 상세한 사용설명서를 부착해 주기 바란다. 특히 다른 농약과의 사용가부표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농약 혼용으로 인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강진군 신전면 부춘리, 송 영환)

(승주군 서면 운평리, 강 학영)

### ③ 農機械

■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 중농이하의 농가는 자력으로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응자지원으로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을 구입해도 연중 사용기간이 짧은데 가격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사용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센타에 부품이 없어 수리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앞으로는 농협 등을 통해 좋은 기술진과 부품을 사전에 확보해 놓고 빠른 시간에 각종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이 만재)

■ 콤바인의 경우 부속품이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한철만 쓰기 때문에 농기계점이 부속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장이 잦아 불편한 점이 많다. 농기계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거쳐서 판매하여 주기 바란다.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박 상록)

■ 이미 부락(단위)에 기계화영농단이 구성되면 또다시 다른 소규모 영농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언제라도 뜻이 있는 농가끼리 기계화영농단을 구성할 시에는 농기계 구입시 영농단과 같은 조건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

(시흥시 장하동, 최 경순)

■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경운기·바인더·이앙기를 구입 이용하고자 하나 3기종의 농기계 가격이 4백50만원 이상이라 중농 이하 농가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보다는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으면 한다.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장 희복)

■ 농촌인력 부족과 노령화가 농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영농기계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농기계 구입시의 국고보조를 실수요자에게 대폭 확대해 주기 바란다.

(순창군 인계면 가성리, 박 정선)

■ 당국의 알선으로 지난 '75년도에 아세아 동력분무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고장이 났는데도 생산회사가 부품생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용을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염 귀)

■ 기계화영농단을 조직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기계화영농단의 농기계구입시 국고보조 혜택 때문에 서류상 공동이용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농기계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농민들 개개인이 각종 농기계 구입시 국고보조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영풍군 풍기읍 백1리, 권 종모)

■ 농지의 경지정리 확대와 함께 농촌 인력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인력난으로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농기계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농번기에는 부품난으로 대구 본사까지 가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동일제품의 경우에도 생산연도에 따라 규격이 달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똑같은 회사제품은 부품규격을 통일시켜 주고, 농민들이 원하는 부품은 부품센터에서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김 종보)

■ 정부에서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화영농단은 50%의 정부보조를 해주는 데 개인이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 부담이 되고 있다. 기계화영농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개인명의로 구입시에도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였으면 한다.

(함안군 함안읍 봉성리, 송 쾌준)

#### ④ 其 他

■ 농협 면세유공급가가 수협보다 매우 비싸다. 영천군지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저유황 경유의 경우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한 드럼(200ℓ)이 2만6천5백11원인데 반해 농협 공급가는 3만1천1백70원으로 4,659원이나 비싸다. 면세유류, 취급 수수료도 수협은 850원을 받는 반면 농협은 3천6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 시정해 주기바란다. (영천군 고경면 동도리, 박 규현)

■ 기계모(육모)상자가 어떤 것은 포개는 구멍이 없는가 하면 구멍은 있는데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많고, 또 크기(규격)도 일정치 않는 등 회사마다 규격이 같지 않아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있다.

(울주군 온산면 삼평리, 신 현길)

■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젊은층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 영농자금과 농지구입자금 지원은 현 농지가격에 준해 지원해 주고, 농기구·비료·농약가격이 농산물값에 비해 비싼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한다.

(경산군 자인면 계남리, 이 영길)

### 3. 農畜產物 價格 保障

■ 열심히 농사를 지어 풍년을 이룩하면 생산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 농업실정은 정반대로 값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전질 수 없는 실정이니 어떤 작목을 심어야 될지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현재 농촌에는 기회만 주어지면 이농하겠다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며, 농수산물 수입도 최대한 억제하여 주기 바란다.

(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박 주철)

■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무슨 작목을 재배해야 할지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재 실정이다. 대체작물 개발로 장려되었던 일부 농산물의 경우 지난해는 생산비 보장이 안되어 가격 폭락으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안정적인 가격에 의한 정부 수매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박 주철)

■ 요즘 당국에서는 물가상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물가상승의 원인을 마치 농축산물 값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처럼 각종 매체에서 보도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한층 더 갖게 된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요즈음의 물가상승은 농축산물 가격상승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과소비풍조, 정책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외치기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천원군 목천면 교촌리, 장 지환)

■ 각종 매스콤에서 물가 특히 농축산물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뛴다고 야단들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생활도 그만큼 나아져야 하겠지만 도처에서 무·배추, 각종 과일 등을 농민들이 스스로 폐기처분하는 등 농촌사정은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비교우위론에 밀려 박해를 받고, 이번에는 수입개방론에 밀려 농사철이 다가왔는데도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할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 당국은 농축산물값이 바닥세를 헤맬 때는 수수방관하다가 값이 조금만 오르면 농민들을 이해시키려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니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을지 모르겠다.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꽈 은형)

■ 일반미 값이 상승하면 물가안정 측면에서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있다. 이곳 산지 쌀값은 80kg 가마당 8만3천원~8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일손부족으로 인해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 (보령군 청소면 장곡리, 박 원규)

■ 이제 농촌에서는 불안해서 농사질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농축산물값이 바닥세로 내릴 때는 당국이 가만히 있다가 값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안정과 농축산물수입개방 불가피론을 내세워 값을 떨어뜨리는 데 정부가 앞장서 왔다고 농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믿고 안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

(영풍군 풍기읍 백1리, 권 종모)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이 구원)

■ 영세농가는 농지값 상승으로 점점 더 어려운 현실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농사가 풍작을 이뤄 잘 되었다고 해도 가격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이 경형)

## 4. 生產基盤造成

■ 현재 농촌은 영농에 종사하는 인력의 70%이상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젊은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산간오지의 농토는 인력난과 고령화로 농토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산간 전답도 경지정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유 성현)

■ 농한기인 겨울철에 하우스, 기타 원예작물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이를 수도작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몽리구역의 수리불안전답에도 정부차원에서 전기가설과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기 바란다.

(논산군 연산면 임리, 임 혁준)

■ 소천마을은 200여농가로 경지면적규모는 약 250여마지기인데 경지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일명 다행이 논으로 기계화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경지정리를 하여 주기 바란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양 재하)

■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촌일손 부족이 심해가는 요즘 경지정리사업을 해줘 농촌기계화 작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꼭이나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마을의 경우 보통 1필지(9백평)내외 천수답이나

산골 논은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 부락 주위의 논은 3백평에 5~6개이상의 논두렁이 있어 농사짓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논두렁 사이가 1~2m이상 되는 논이 많아 경지정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태여 9백평 정도의 규격을 맞추지 않더라도 4백~5백평, 5백~6백평 정도로 해서라도 논두렁을 바로잡아 주었으면 한다. 일부 농민이 자부담으로 정리작업을 하고 싶어도 많은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본인 자부담으로 사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해 주었으면 한다.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양 병모)

■ 기계화 영농을 위해 70년대부터 농로를 신설,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로는 토지소유자와 어렵게 타협하여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농로로 소요된 땅의 면적까지 포함하여 재산세가 고지되는 바람에 2중의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송 규섭)

■ 시설화훼를 위해 비닐하우스(내구년한 3년)를 반영구적인 온실(10년이상)로 개축하기 위해 농경지 중앙에 설치된 전신주를 밭뚝쪽으로 이설하려고 한전측에 문의하였더니 규정상 이설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경지 소유자가 이미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농민들이 반영구적(고정식) 비닐하우스 및 기타 농업시설물의 신·개축시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도 일반 건축물의 신·개축시와 동일하게 이설 비용을 한전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히 있다고 본다.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공 만우)

■ 이곳은 지난 '75년도에 야산개발을 하였으나 개발한 토지는 대부분 도시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나마 개간한 논도 농로가 없어서

기계화 영농을 못하고 있어 농사일에 어려움이 많다.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바라며 농로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나 일균)

■ 농촌인력 부족으로 앞으로는 완전 기계화가 되어야 농사를 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경지정리를 할 경우 1구간이 480평~600평 이어서 기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구간격이 너무 좁아 농사를 짓기에 불편함이 많다. 최소한 1구간을 1,000~1,200평으로 재경지정리 해 주었으면 한다.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이 구원)

## 5. 農業金融 · 農家負債

■ 현행 가정용 전기를 농사용과 똑같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편 농촌의료보험료의 지난해 대비 30% 정도 인상은 농촌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 재조정이 절실하다. 농촌주택을 개량이나 신축하려 해도 1개면에 1~2 가구분에 해당하는 응자금이 할당되고 있으며 그나마 금액이 낮아 어려움이 많다. 주택개량이나 신축을 원하는 농가에 대한 응자금을 확대 지원해 주기 바란다.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조 평희)

■ 현재 농협의 일반신용대출금리 14%는 농가실정으로 보아 높다. 대출금리를 낮춰 주길 바라고 상환기간도 1년은 너무 짧으니 3~4년 정도로 연장해 주었으면 한다.

(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박 주철)

■ 영세농보다는 중상의 농민들이 영농자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예산을 농기계 가격인하, 농기계 구입시 혜택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원군 이백면 양가리, 안 명엽)

□ 단위농협의 대출금리는 일반 상호금융자금의 경우 연리 14%로, 농협군지부와 지방은행 대출금리 12.5%보다 1.5%가 높고, 시중은행

대출금리 11.5%보다 2.5%가 높다. 현 농촌실정으로 볼 때 일반 상호금융자금은 8% 정도로, 단기 영농자금도 현 5%에서 3%정도로 낮추어 주길 바란다.

(영덕군 병곡면 영2리, 권 영활)

■ 당국이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자금금리인하 및 원금상환 연기조치는 더욱 악화만 되어가고 있는 현 농촌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미흡하므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박 병대)

■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농가부채가 1980년 호당 33만 8천원에서 1989년말에는 호당 313만 1천원으로 10여배나 증가하는 등 그 동안 정부의 공업 중심 경제정책 추진으로 상대적 소외를 당해 온 것이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부채 증가율이 농어업소득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의 농어촌 사정으로는 기존 부채의 상환을 위해 새로운 부채를 졌야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형편을 감안할 때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에 의해 그 동안 열심히 살아온 농민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껏 혜택을 받는 것이 있다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정도이며,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연기해 온 소수의 농어가들이 부채경감을 받은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형평에 맞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영동군 양강면 미포리, 성 필준)

■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에서 중장기 자금은 제외하더라도 일반상호금융자금은 경감대상에 포함시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영동군 상촌면 하도대리, 남 영현)

■ 현재 3천평미만 경작농민들에게만 농어촌부채경감 혜택을 주어 무이

자 또는 이자율을 3%로 낮춰주고 있는데 이를 3천평미만 경작농민 일부는 부업으로 공단 등에 나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바, 3천평이상 중농 등은 오로지 농사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영농자금도 더 필요한 실정이다. 3천평이상 농가까지 확대해서 부채 경감 혜택을 주기 바란다.

(여천군 동산읍 평사리, 박 종근)

■ 정부는 농어가 부채경감 지원 한도금액을 가구당 중장기자금 400만 원, 상호금융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채금액이 중장기 자금 200만원, 상호금융 400만원인 경우는 경감혜택을 400만원 밖에 보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농가에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채경감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을 통합하여 가구당 600만원으로 하여 주었으면 한다.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김 진락)

## 6. 農村社會 · 營農後繼者

■ 농촌인구 특히 젊은층은 계속 줄어 늙은 사람만으로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부 구하기도 힘들어 산골 논이나 밭이 점차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어 산간지역을 포함한 전체 농경지의 영농기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30~40대의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도 심각하다.

(나주군 와도면 풍산리, 최 국일)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 김 채현)

(천원군 광덕면 원덕리, 김 상용)

(안동군 길안면 협하리, 권 태광)

■ 이 지역은 산간지방에 속하지만 10년전만 해도 놀리는 논·밭이 없었으나 현재는 생산비, 인건비도 전질 수 없다고 경작을 포기, 노는 땅이 늘어만가고 있다. 농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바란다.

(천원군 광덕면 원덕리, 김 상용)

■ 현행 농민후계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농민후계자의 연령이 35세 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들 20~30대의 젊은 후계자들은 처음 계획대로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농민후계자 선정기준 연령을 40대초반까지 확대해 경험을 살려 성공해 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

로 생각된다.

(울주군 온산면 삼평리, 신 현길)

■ 82년도에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어 그 당시 6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송아지 5두를 구입했다. 4년이 경과한 후 총두수는 18마리가 되었으나 자금의 한계에 이르러 86년 소파동 당시 송아지를 혈값에 매도하는 바람에 빚만 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때 본인의 나이가 35세로 결혼도 해야겠고 빚도 갚아야겠기에 잠시 도시에 나갔더니 농민후계자 이탈자라 하여 농촌부채경감대책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한다. 잠시 농어민 후계자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경우 부채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평창군 미탄면 창1리, 지 종태)

## 7. 勞動力 · 勞賃

■ 농촌 품삯이 현재 남·여 공히 2만원, 외지 전입 인건비는 남자 2만5천원, 여자는 2만2천원으로 터무니 없이 상승하여 농사를 지어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식량작물 농사는 농민들 스스로 포기하는 실정이다.

(대덕군 산내면 대별리, 양 승만)

■ 요즈음 농촌에는 60~70세의 고령 농민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기계화영농, 위탁영농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나마 각종 영농비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소득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화순군 남면 절산리, 김 매갑)

■ 현재 농촌은 대부분 노약자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관계로 일손이 크게 부족한데다 인건비와 농기계 사용료가 지난 해보다 무려 30% 정도 가 인상돼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기계화 영농 단을 조성하려고 해도 산지오지인 관계로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지조성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군위군 우보면 선곡3리, 황 재기)

■ 요즈음 농촌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이 농촌에 유치되면서, 젊은 사람은 물론 부녀자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인해 그나마 품삯은, 남자가 2만원 부녀자는 1만~1만5천원을 주더라도 일손을 구하기

가 힘들어 이곳 산간지대 전답은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2~3년 후면 잡초가 무성한 전답으로 변화될 것 같다.

(함안군 함안읍 봉성리, 송 해준)

■ 대도시 등에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소유하지 않은 노령자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식량 및 연료비를 정부에서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자경농지를 가지고 있는 노령자는 계속해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생보자 중 50%이상이 충분한 노동력이 있음에도 일손을 놀리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자 해당자를 좀더 면밀히 조사하여 선정함으로써 농촌노동력부족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박 병도)

## 8. 農地稅 · 農地購入

■ 서산군 농지개량조합은 임대한 논의 유지 임대료를 경작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추곡수매가 2등품을 기준 현금으로 수납해 가고 있다. 농사를 지어 보면 잘 지은 농가, 보통 지은 농가, 못 지은 농가가 있기 마련인데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어 불공정한 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추수기에 현지 답사해 현실에 맞도록 조정, 현곡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태안군 근홍면 수룡리, 김 종길)

■ 농촌인구의 도시 진출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지분배 당시 입법한 3ha의 농지소유 상한 제도로 인해 경지면적을 늘리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후 경작능력에 따라 경작규모 제한 3ha를 가능한 한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박 상록)

■ 농촌에는 요즘 추수를 끝내고 농한기로 접어들고 있어 농지매매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각 시군에 농어촌진흥공사 지부가 설립되어 있어 공사에 의뢰하여 농지를 구입하려 하나 연령제한에 묶여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년간 영농에 종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 신 공식)

■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까닭에 자꾸만 농가부채가 늘어 농지의 용도를 변경, 축사를 지어 가축을 사육 소득을 올리려 해도 수리불안전답까지 절대농지로 묶이는 바람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 농지를 팔아 사채를 갚으려 하는 데도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만 농지매매가 허용되어 있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빚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편을 고려 당국에서는 수리불안전답을 절대농지에서 해제하여 주기 바란다.

(공주군 우성면 목천2리, 조 응래)

■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좋은 뜻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지구입자금 지원금이 순수한 토지구매에 사용되지 못하고 실제 경작인은 바뀌지 않은 채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바꾸어 융자금만 받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며 더구나 이 자금이 도시로 송금되고 있어서 농촌에는 도움이 못되고 있다. 차라리 이 자금을 기계화영농단 지원금으로 전용해 주기 바란다.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조 몽석)

■ 농민이 영농자금과 사채를 갚기 위해 농토를 매매하려고 해도 이웃에 사는 농민은 농토를 매수할 만한 재력이 없어 타지역 사람에게 매매하려 하지만 경작자의 제한거리에 묶여 토지매매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郡(군)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농토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제한조치가 완화되었으면 한다.

(영월군 남면 연당리, 고 복기)

□ 당국이 지원해 주고 있는 농지구입자금으로는 농지값 상승으로 인해 적절한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다. 농지구입자금 지원의 확대가 요망된다. 농협의 영농자금은 농사준비를 위해 1~3월 말까지는 지원해

줘야 하는데 4~8월 경에나 배정,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농가는 별도 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영농자금은 1/4분기에 집중 지원해 주기 바란다.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이 경형)

■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지구입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농지구입자금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영농자금을 더 많이 융자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이 경형)

■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뜻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지구입자금 융자금이 순수한 토지구매에 사용되지 않고 등기부상만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 융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군 감포읍 전촌리, 김 영곤)

■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내용에 농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농지매매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자녀교육, 영농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처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김해군 대동면 대감리, 윤 형섭)

■ 요즈음 도시인들은 전답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가옥은 이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가옥을 사들여 땅값을 대량으로 키워 목장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의 식수가 오염됨은 물론 오물이 농지에 흘러들어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바란다. 또한 농지가격이 너무 싸므로 도시인들에게 전답도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하여 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울주군 두동면 하월평리, 심 광수)

■ 농촌에서는 농지를 팔려고 해도 농지매매증명 발급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매매도 침체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여 농지를 처분하려 하는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행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와 관련한 확인절차 및 발급신청접수 등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 가능하면 법을 완화하여 같은 지역(도)의 도시사람들도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토지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정 정화)

## 9. 畜 産

■ 요즘 우유소비 부진으로 인해 유가공업체나 낙농가들은 낙농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황을 누릴 때는 유가공업체가 이익을 보고 불황일 때는 낙농가만 손해를 입고 있는 현제도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려면 하루빨리 집유 일원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파주군 파주읍 부곡리, 고 종서)

■ 정부에서는 쇠고기가격안정 및 우유적체 해소를 위해 보조금을 주어 저유량 젖소를 도태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마리당 1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좀 더 가격을 올려주기 바란다.

(평창군 도암면 차항2리, 박 병대)

■ 소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요즘 전국 각처에서 소 도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방지책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예전에는 우시장의 가축거래가 오후 3시가 지나 형성되던 것이 요즘은 새벽(4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에 개장되어 소도둑이 밤에 끌고와 개장 즉시 팔아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져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본다. 여러모로 도둑들만 도둑질하기와 방매가 용이하니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 정도의 시간대로 개정되면 도둑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천원군 광덕면 원덕리, 김 상용)

■ 본인은 '86 낙농부문 영농후계자이다. 대부분의 목장이 그렇듯이 마을과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진입로, 교통·문화복지·교육시설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정주생활권 개발 등 농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큰 관심을 가져보나 해당사항이 없어 불만과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다. 소수가 처해 있지만 농업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김학용)

## 10. 特 作

■ 진양호 호수에서 8Km 떨어진 농업용수가 풍부한 상류 지역으로 지난 '89년에는 가을 짐장배추와 무우가 풍작, 생산농민들이 즐거워 했었다. 그러나 인건비와 수송비는 계속 올랐는데도 짐장배추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폭락,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 그냥 방치하여 썩어 가고 있는 데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 판로가 막혀 생산비를 건지지 못할 경우에는 적정금액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진양군 대평면 대평리, 하 종갑)

## 11. 農外所得

■ 식량부족일 때 제정한 절대농지를 과감히 해제하여 소규모 공장을 농촌에 유치하면 농민들도 공장에 나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동시에 도시 인구집중화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김 세홍)

## 12. 農村福祉·文化施設

■ 우리 지역 시흥군 군포읍은 시로 승격되었으나 행정은 도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촌이면서도 현지에 맞는 농업을 할 수가 없다. 우선 절대농지에다 그린벨트지역이고 또한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어 기계화 영농도 할 수가 없으며, 소득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촌 개발 및 소득사업을 위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군포시 부곡동, 꽈 태찬)

■ 평소 어느 곳을 다녀봐도 이곳 만큼(당진군 고대-천의-두산리) 포장이 안된 곳은 없으며 비가 올 때마다 부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근년에 들어와 100m도 안되는 짧은 도로에 몇달씩 걸리는 시멘트 포장공사로 교통만을 불편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계속되는 비로 인해 버스가 안다녀 주민들은 약 1km나 되는 천의까지 걸어 다니는 고통이 있었다.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2리, 김 석구)

■ 현재 농촌에는 짧은 인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다가 농로마저 영망이어서 나이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해마다 농로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간접적인 유실로 인하여 기존쪽은 찾기가 매우 힘들고 비가 조금만 와도 굴파진 곳이 많아 농기계는 커녕 사람도 다니기가 힘이 든 형편이다. 측량을 해서 시멘트 포장을 한다면 농사짓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선산군 옥성면 농소리, 이 상진)

■ 정부에서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시책의 일환으로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려는 농가가 많다. 그러나 희망자는 많은데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은 실정이다. 현실적인 금액지원 바란다.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윤 양수)

## 13. 農畜產物 輸入

■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 따라 농민에 대한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축소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촌의 농민들은 누적되는 영농부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채를 지지 않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수립을 바란다.

(정선군 북면 여량1리, 위 봉돈)

■ 현재 농촌실정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계획성 없이 농수산물을 수입, 농민들은 생산의욕을 잃고 있는 데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농업협상 마저 진행되고 있어, 살곳을 찾아 이농도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수입억제가 절실하며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대책 마련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충원군 이류면 두정리, 원 상호)

■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작목선택의 폭이 좁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어느정도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던 더덕이나 시호 등과 같은 특용작물을 일부 상인들이 국내산보다 값이싼 중국산 등을 수입해서 오히려 국내산보다 비싼 값으로 버젓이 판매하는 등의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이의 단속은 물론 이번 기회에 국내산의 우수성을 정부가 맡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

(예산군 삽교읍 이리, 남 진우)

- 우루파이 라운드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대체 작물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수입개방 대처 방안으로 군 농민회 주최로 각종 저지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모든 농민들이 이해하고 설득력이 있도록 UR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한다. (김제군 광활면 옥포리, 이 동구)
-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곽 은형)
- 농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해 농촌에서는 재배할 작목이 없어 폐허 일로에 놓여 있다. 부득이하게 수입개방을 해야 할 경우에는 농축산물에 대해 농·수·축협으로 수입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며, 수입에 따른 이익금을 해당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흥군 대덕읍 서신리, 김 종열)
-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부,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 농산물 먹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칠곡군 북삼면 울리, 최 상준)
- (울주군 응촌면 검단리, 차 종호)
- 농수산물 수입권은 농협중앙회가 관장토록 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은 농민사업 및 농산물수매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감귤 등과 같은 지역특화작목은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농축액 쿼터제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김 대온)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읍·면단위로 특성에 맞는 작목과 품종을 선택하여 지역단위로 시범포를 운영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당진군 순성면 아찬리, 김 태국)
- 요즘 농촌의 농민들은 정부에서 시키는 반대로 하여야 수입원이 되고, 정부의 정책을 잘 믿고 따르면 손해만 본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농정의 불신은 농수산물 수입,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 등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농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색함으로써 농민이 농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본다.

(안성군 일죽면 능국리, 허 한우)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이 기식)

■ 농촌의 농민들은 우루파이 라운드협상 등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착잡하기만 하다. 얼마 안되는 경지이지만 처분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 농민이 안심하고 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농촌에의 과감한 투자를 바란다.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송 우용)

## 14. 農畜產物 流通構造

■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막아 이들의 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 면단위를 대도시 소비지역인 구청 및 동사무소와 연결,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었으면 한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양 재하)

■ 중간상인들이 너무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어 생산자인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kg 사과 1상자를 1만원 안팎에 경매하면 소비자는 2만원 이상 주고 사먹게 되는 유통마진이 100% 이상 되는 실정이다.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민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박 의묵)

■ 신문·방송 등의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농민들은 농산물수입개방 및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상 등으로 인해 국내농산물의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지역이나 군단위의 중앙집합지에 농업전시관 및 특산품 전시장을 세워 직거래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박 병대)

## 15. 子女教育

■ 정부가 올해부터 농민들의 교육비 경감책으로 농경지 1정보미만 경작농가에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혜택이 중학생과 실업고 1, 2학년에만 국한하고 인문계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정 농민들의 학자금 지원 측면이라면 인문계 고등학교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통영군 용남면 동달리, 정 남수)

## 16. 水害 · 旱害

■ 앞으로 시행·계획인 『농업재해보험』 내용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 경작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가입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농업의 농작물피해 정도(%)를 책정하기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오차가 있기 마련이어서 보험관리측과 피보험자간에 많은 마찰과 알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점 깊이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양군 현북면 찬교리, 이 완산)

■ 수해·한해가 극심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수리시설과 경지정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 한편 추곡수매는 농가 희망 전량을 받아주었으면 한다.

(고양군 화전읍 환전리, 이 진)

## 17. 環境汚染

■ 이곳은 산업폐수로 농작물이 죽어가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받았지만 산업폐수로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성군 태안읍 신2리, 한 광수)

■ 소규모의 축산단지에도 폐수처리장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폐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축산폐수가 농경지로 흘러들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하천은 오염되어 가고 있다.

(서산군 성연면 예덕리, 장 홍진)

■ 현재 농촌은 농약빈병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일부 수거를 하고는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제때에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농민들의 비협조로 농약빈병이 온 들판에 널려 있고 너나할 것 없이 무관심 속에서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감안 현행 농약 빈병을 개당 3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0원으로 올려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면 빈병 수거율이 달성될 것 같다.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김 의기)

(창녕군 연상면 성내리, 박 종길)

■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개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농촌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쓰레기 하치장 증설, 정기 연막소독, 저독성 농약 및 해독제 개발 등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순창군 인계면 가성리, 박 정선)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조 석환)

■ 지금 면단위 농촌지역에서 사용후 버리는 농약빈병의 수량은 연간 몇 트럭이나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굉장할 것으로 보는데, 폐비닐이나 종이 등은 소각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농약빈병은 소각도 할 수 없어 현재 땅을 파고 물거나 개천에 뿌워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토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아까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농약빈병 수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달산면 옥산1리, 윤 세홍)

■ 각종 폐비닐, 깡통, 농약공병 등 막대한 쓰레기가 제방 하수구나 하천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어 농촌환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마을단위의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김해군 주촌면 천곡리, 한 태희)

## 18. 其　　他

■ '7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도시거주 자녀들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고 실제 농사는 부모들이 짓는 경우에 이는 부재지주가 되어 많은 세금을 물고 있다. 이러한 농토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와 동일 취급을 함으로써 향후 귀향하여 영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박 병도)

■ 행정부락이 100호 이상될 경우에는 분구(分區)를 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하고 쌍방이 경쟁심을 갖게 되어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요즈음 같이 민원이 많은 때에는 행정구역(면사무소·우체국)을 생활권 위주로 개편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바란다.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박 병도)

■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우선 가옥 증축이 안되어 커가는 아이들 방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우며, 그린벨트라는 불리한 점 때문에 땅값이 주변보다 훨씬 싼 데도 토지세는 별 차이가 없어 이 지역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시흥시 장하동, 최 경순)

■ 전화 등 각종 공공요금의 경우 해당 징수원이 없어 매월 8Km나

되는 읍·면의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번기인 경우 이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므로 조처를 바란다.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염 귀)

■ 국도변 100m이내에 축사나 농기구창고 등 부속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농민은 관계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농민(3백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1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자)은 읍·면장으로부터 토지 용도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용도증명 발급신청과정이 가설도를 첨부하는 등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정이므로 대폭 간소화시켜 주기 바란다.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김 동수)

■ 기름제조회사인 H식용유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1차 가공이나 단순가공 등 어렵지 않은 사업은 생산농민들에게 돌려주고, 대기업의 참여를 억제해 주었으면 한다.

(예산군 삽교읍 이리, 남 진우)

■ 지난해부터 농민신문 등을 통해 쌀 과잉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농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기에는 여유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시책발표전 충분히 조사한 후 많은 검토를 거쳐 농정시책을 펴 주었으면 한다.

(예산군 삽교읍 이리, 남 진우)

■ 기계화에 따른 기계조작훈련 및 정비보관에 대한 교육, U.R농업협상에 대비한 각 지역별 특용작물(토지특성에 따른) 재배기술 및 재배작물 권장 등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농정시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경산군 자인면 계남리, 이 영길)

■ 전화요금납부를 위해 우체국이나 단협까지 가야함은 물론 납부일 하루만 경과해도 1할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농촌에는 어려움이 많다. 전기료 수금과 같은 사원제도를 채택, 가정방문하여 수납을 했으면 한다. (거제군 거제읍 옥산리, 이 명우)

■ 농어촌의 극소수 유부녀들과 미망인들 사이에 성에 대한 개념이 쾌락주의로 흐르는 경우를 가끔 목격한다. 농어촌 여성들을 상대로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평화와 사회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김 종길)

빈

면

D 18-15

## 1990년도 농민이 바라는 농정

---

찍은날 1991. 3

펴낸날 1991. 3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